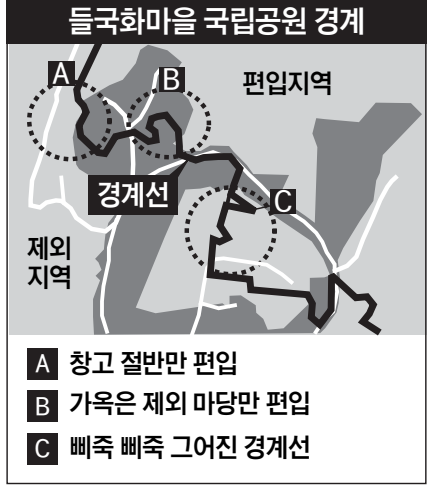


국립공원 경계선에 찢겨진 마을



화순 들국화마을 29가구 중 10가구만 편입되며 갈등 창고·마당 절반만 포함된 곳도...2년새 이장만 네번 교체 단란했던 마을 주민 다툼 잇따르며 흥기 위협까지

국립공원 경계선이 화순 지역 29세대 들국화마을을 둘로 갈라놓으면서 주민들 마음의 벽만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전체 주민들 중 10세대 거주지만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비롯된 사태로, 재산상 불이익 뿐 아니라 양측 입장을 따르는 이장이 나서는가 하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갈등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란했던 들국화 마을은 무등산국립공원 경계선이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을을 나뉘어 확정되면서 시작했다.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주민들은 느닷없는 국립공원 확정 이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매년 해오던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금지됐고 약초도 함부로 채집할 수 없게 됐다. 가족도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고 주택 개·보수 등도 제한됐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하던 주민들은 툼니바퀴처럼 들쭉날쭉 확정된 경계선을 따라 공원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장이 주민들 모르게 동의서를 국립공원 공단에 제출하는 바람에 애초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기로 된 마을이 공원 구역으로 묶어버렸다'는 말도 터져 나왔다. '누구집 마당은 공원에 포함됐는데 또 다른 주민 마당은 공원 밖이다. 또 누구는 창

고 절반은 공원 안에 나머지는 밖으로 선이 그어져 버렸다. 어떻게 경계를 그었는지 알 수가 없다' 등 온갖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 국립공원구역 편입에 마을 이장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다시피 하면서 2년 새 마을 이장만 4차례나 바뀌었다. 주민들이 추대하는 식으로 뽑던 이장은 아예 읍사무소에서 선거 공고문을 붙이고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큰 행사가 됐다. 이장이 새로 뽑히기만 하면 서로 의심한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자격 시비를 걸어 교체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잦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골이 깊어지자 흥기를 들고 서로 위협하면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주민도 생겨났다.

마을 주민 일부는 법과 제도에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화순군, 전남도 등에 30여 건 상당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접수된 민원은 하나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 국립공원에 편입되지 않기로 했던 들국화마을이 왜 포함됐는지, 경계선은 왜 툼니처럼 마을을 가로질러 확정된 것인지... 공원 경계선이 마을을 가로고 지나면서 평온했던 마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따르니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확정된 공원 경계를 재조정해달라는 행정심판도 문모(53)씨 등 주민 일부가 제기했지만 "절차는 적절하게 이

뤄졌다"며 기각됐다. 그러는사이 '경치 좋고 조용하다고 해서 찾아온 마을인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잔성이든 반대든 이제 좀 뜻을 모으고 그만 싸워라'면서 마을을 버리고 떠나간 주민도 나타났다. 한 주민은 "무심코 그어버린 국립공원 경계선이 수십 년간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 주민들을 서로 적(敵)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이게 다 국립공원 지정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오거나 공청회도 없이 책상을 앉아 졸속으로 그어버린 탓"이라며 당국을 원망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평온했던 들국화마을이 국립공원 경계선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20년쯤 개계가 예정된 기본계획 타당성 재조사시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공원 경계선으로 불거진 갈등을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012년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 공원 경계선이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평온했던 들국화마을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화순읍 수만리 들국화마을 전경.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영광 어민 3월까지 설득한 후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이송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오는 3월까지 영광 지역 어민 설득 작업을 마무리 짓고 해상 이송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4일 오후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한빛원전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광주 이송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 계획을 밝혔다. 공단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오는 3월까지 원전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6월부터 2개월간 폐기물을 옮기기 위한 부두시설인 물양장(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준설 공사를 완료한다. 이어 광주 방폐장으로 폐기물을 이송할 계획이다. 총 운반거리는 843km로 48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길이 78m, 폭 15m, 2600t 적재 규모의 운반선은 국내에서 제조한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이다. 공단 측은 1차례 선박 운송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1드럼은 200ℓ)을 옮길 계획이다.

화물창에도 콘크리트 차폐시설을 설치해 안전 운항과 방사성 물질 누출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됐고 운반선 내부 10곳에 방사성 감시설비를 갖춰 실시간으로 방사능 오염 체크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고의 저장률은 지난해 말 기준 96.5%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상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안전성 관리 방안과 이송 계획 발표에도 안전성을 문제삼은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단 측의 폐기물 해상 이송 계획은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영광원전수협대책위 관계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위험성을 격정하며 반대하는 어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매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과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원전에 임시 저장중인 핵폐기물이 포화돼 발전소가 멈추게 되더라도 안전성 확보 없이는 해상 이송은 막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한변협 “여수출입국사무소는 교도소 같은 구금시설”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열악하고 후진적 운영 지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개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열악하고도 후진적인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변호사 11명과 유엔난민기구 직원 1명이 참여해 구금 실태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남 지역 내 유일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는 커녕, 후진국 수준의 난민 관리 행태를 고

스란히 드러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변협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시설들을 둘러본 뒤 "보호외국인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형사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중 '징발방'으로 불리는 독거실(9.2㎡)의 경우 담배 같은 금지품을 지닐 때와 보호외국인

끼리 싸움을 할 경우 가게 되는데, 구금되기 전 구두와 서면으로 1회 경고를 할 뿐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징발방은 세면대, 샤워시설도 없고 수도꼭지만 설치돼 있으며 운수는 오전 8시, 오후 4시, 각 1시간씩 단 2차례로 제한해 공금하는 등 후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외국인 1명에게 배정된 한끼 식비도 직원 한끼 식비 3500원의 3분의 1 수준인 1300원에 불과했고 제공되는 반찬의 경우 규정상 3가지지만 국·김치가 반찬에 포함돼 식단이 구성되다보니 매 끼니 바뀌

는 반찬은 한가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내를 위한 책자도 일부 보호실에만 비치해놓는 가 하면, 3권 중 1권만 비치돼 10개 국어로 절차 안내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그나마 난민신청절차 안내문과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는 한국어·영어로만 작성돼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정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에 참여했던 고지운(여·37)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이는 피구금자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기는커녕 대한민국 영토에서 추방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겨진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촌형제 4명의 탈선...카드 훔쳐 귀금속 산 뒤 되팔아 유흥비 탕진



○PC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다른 금은방에 내다 판 20대 사촌형제 4명이 경찰서행. ○2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 등 3명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PC방에서 진모(21)씨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같은 날 오전 광주시 동구 일대 금은

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을 구입한 혐의. ○이들은 구입한 금반지를 또 다른 금은방에서 50만 원에 되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만행으로서 군입대를 앞둔 막내 사촌동생에게 술 한 잔 사주고 싶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 6400만원 (1/2 분할매매 가능)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

광전파크 “빌라”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4층 20평
- 동남향, 2013년 신축
- 방2, 화1, 거실
- 신우 APT 근처, 즉시 입주
- 매매 - 9900만원 (대출 4900만원 안고)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물수리
- 매매 - 5천1백만원

- 29평, 10층
- 양동 하천 방향, 전망 좋음 주거겸 사무실, 전체 물 수리
- 매매 - 7천 2백만원 (일시불 조정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근린상가 “지하”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